

도내 야권,尹 체포에 “엄정 단죄”

민주 “불행한 헌정사 반복 않도록 관용없는 단죄 우선” 조국혁신당 “민주공화국의 가치 되살리는 계기 돼야” 정의당 “아직 밝혀지지 않은 공범들 낚날이 색출해야”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의 체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등 도내 정치권이 15일 '내란 전모'를 밝히고 '엄정 단죄'를 촉구하고 나섰다. 먼저,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 국회의원)은 김슬지 수석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전북도당은

윤석열 체포가 국헌을 유린한 일당의 내란 전모를 규명·단죄하는 시작이자 내란으로 무너진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정국 정상화의 발판”이라고 평가했다. 도당은 그러면서 “윤석열 체포는 국격 회복의 시작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오늘의 불행한 헌정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란 일당에 대한 관용 없는 단죄가 우선이라는 것을 촉구하며 내란 소요의 혼란을 신속히 수습하고 진정한 정치의 일인 민생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도상)도 입장문을 통해 “체포는 시작일 뿐이다. 구속과 기소, 재판과 탄핵을 통해 내란과 헌법 위반에 대한 죄를 단호하게 묻고,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되살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도당은 “3년은 너무 길다. 약속을 지켰다”면서 “한발 더 나아가 정권 교체를 넘어, 수도권과

지역 간의 불평등을 바로잡는 사회개혁을 실시하는 새로운 민주정부를 수립을 위해 조국혁신당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도 긴급 성명을 통해 “윤석열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내란죄와 같은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질러 중형이 예상된다”면서 “피의자 윤석열을 구속하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도당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공범과 관련자들을 낚날이 색출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만호기자



설 명절 종합대책 발표하는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15일 오전 도청 기자회견실에서 기자들을 초청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설 명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우원식 의장 “혼란 일단락... 특검법 신속 처리”

윤석열 체포에... “국정협의회 조속 가동, 최선 다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된 데 대해 “혼란한 상황이 일단락된 만큼 국정안정과 민생 회복에 역량을 모아야겠다”고 했다. 비상계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낮 12시께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됐다”며 “우려하던 충돌

없이 법 집행이 돼 다행”이라고 했다.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어 “국회는 내내외적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의원외교와 민생안정을 위한 ‘국정협의회’의 조속한 가동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야 간에 논의 중인 특검법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야당이 발의한 '내란·외환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이며, 국민의힘은 전날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해 여야 간 협의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우 의장은 여기에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는 언행은 자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전북 시군의회의장들 “尹 체포 환영, 내란 공범 처벌하라”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15일 논평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 등의 혐의를 받는 방패 역할을 하며, 엄정한 법 집행과 국민의 한결같은 여론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북 14개 시·군 의회를 대표해 내란 수괴 윤 대통령 체포를 환영한다”며 “오늘 체포는 영하의 맹추위와 폭설 속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들쭉날쭉하고 일어난 국민, 그리고 민주전북도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내란 수괴를 체포한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그와 동조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일당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 땅에 헌법을 유린하는 지도자가 나올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공수처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밝혀내고, 내란에 가담하고 동조한 공범을 처벌하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전북선관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단속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 제공·사전선거운동 등 우려 판단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15일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 예정자 등이 인지도 높이고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했다.

각 구·시·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한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와 새마을금고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방문 면담, 안내 자료 배부 및 각종 계기를 이용해 적극적인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다만, 사전 안내에도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00만원의 벌위에서 제공 받은 금

/이만호기자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회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 사진)는 15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새해 처음 열린 제27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8일 2차 본회의에서는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남원시의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라 제출된 조례안과 예산안이 의결됐으며, 여러 차례의 진통 끝에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또한, 15일에 열린 3차 본회의에서는 △농업용 난방비 부담 감경을 위한 면세유 대상에 경우 포함 지원 촉구 건의안 △개형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정책과 법률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태 의장은 폐회사에서 시민들에게 “오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민생안정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며,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을 확인해 지원금을 수령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 사진)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의회(의장 서백현)가 15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이틀간 진행된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올해 첫 임시회였던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14일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해 김제시 일상회복지원금에 대해 오승득 의원이 발의한 ‘김제시 재난기반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뒤, 마지막 날인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지난 14일에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2025년 본예산에서 388억6,800만원이 증액된 1조1,653억3,5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임시회에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은 김제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김제시민 약 8만여 명에게 일상회복지원금 5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서백현 의장은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이번에 수립된 추가경정예산이 시민들의 일상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김제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진정한 시민의 대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

추경 예산안 최종 확정

김제시의회(의장 서백현)가 15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이틀간 진행된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올해 첫 임시회였던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14일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해 김제시 일상회복지원금에 대해 오승득 의원이 발의한 ‘김제시 재난기반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뒤, 마지막 날인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지난 14일에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2025년 본예산에서 388억6,800만원이 증액된 1조1,653억3,5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임시회에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은 김제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김제시민 약 8만여 명에게 일상회복지원금 5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서백현 의장은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이번에 수립된 추가경정예산이 시민들의 일상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김제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진정한 시민의 대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기원”

문승우 도의회 의장, GBCH 챌린지 동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이 15일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기원하는 GBCH 응원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하며, 전북도민의 결집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GBCH는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슬로건인 ‘Go Beyond, Create Harmony(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의 줄임말로, 문 의장은 김관영 도지사의 지목을 받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하게 됐다.



문승우 의장은 “대한민국 전통문화의 수도, 전북의 올림픽 유치는 새로운 올림픽 역사의 시작”이라며 “지방 도시연대, 첨단기술과의 조화, 친환경 그린 올림픽으로 세계와 함께 미래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36 하계올림픽 유치의 꿈은 전북도민이 힘을 모으면 현실이 될 것”이라며 올림픽 유치를 위한 도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한편 문 의장은 다음 GBCH 응원 릴레이 챌린지 주자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부의장과 군산시의회 김우민 의장을 지목했다.

/이만호기자

헌재 헌법·법률 위반 여부 판단 주요근거자료 요구시 제출 의무화

민주윤준병 의원, ‘헌재 요구자료 의무 제출법’ 대표발의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위헌·탄핵 등의 심판을 관장하는 헌법재판소가 원활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요한 경우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등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따른 ‘자료제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단서조항을 악용하여 증거 확보를 늦추거나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지연시키는 등 ‘자료제출 원칙’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9조를 통해 원본 제출이 곤란한 경우 인증등본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돼 있다. 이는 재판부의 원활한 심리를 보장하고,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되는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함으로써 심판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위급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현행법 제32조 단서를 범죄수사 등이 진행 중인 사건의 자료 ‘원본’의 제출 금지로 해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해 자료 제출을 방해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국회 농해수위)은 15일,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료 제출 지연의 빌미 제공하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 헌법재판소 요구자료의 제출 원칙을 강화하는 ‘헌재 요구자료 의무 제출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헌법 제111조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위헌·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 등의 심판을 관장하며, 현행법 제10조 및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2조2항 등을 통하여 심판에 필요한 민감정보·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이에 윤준병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도 헌재 재판부가 재판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증등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해 ‘자료제출 원칙’을 강화했다.

또한 윤 의원은 개정안에 현재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불출석 증인의 구인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며, 증인 및 감정에 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군산시의회 경건위, 현장의정활동

농업 근로자 기숙사 신축현장서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가 15일 농업 근로자 기숙사 신축 예정지 현장을 방문해 사업계획을 청취하고 개선사항 등을 제안했다. 해당 사업은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농업분야 근로자 4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동숙소 건립을 위해 총사업비 24억 원(국비 12, 도비 3.6, 시비 8.4)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사업부지는 2019년 군산시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위해 국방부로부터 매입한 옛 초산부대 내에 입지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경제건설위원들은 입소하게 될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입장에서 군산시 관내에서의 노동 및 거주환경 만족도를 고려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단순히 민원발생 우려 등으로 외진 곳에 격리시킬 만한 공간이 아니라 근로자들도 하여금 우리 지역에서의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대상지 검토를 강조했다. 또한, 사업하기 좋고 민원이 적을 만한 사유지로서 입지 대상을 국한하지 말고, 보다 양호한 조건의 입지에 대한 신속이나 기존 공실이 많은 지역의 원룸에 대한 매입 등 열린 사고로 사업 추진방향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군산=이재훈 기자